

한 · 중 · 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 3 한 · 중 · 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금찬 (국립외교원 교수)
- 14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4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금찬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 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 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 중심의 신경제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하지만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였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원전제로' 표명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을 의미하는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

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를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 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 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금찬 (국립외교원 교수)

목 차

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
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
 - 가. 영토 문제
 - 나. 역사인식의 문제
 - 다. 민족주의 문제
 - 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3. 몇 가지 고려사항들
 - 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 다. 한·중·일 3국 FTA 체결
 - 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 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

-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관계가 또 다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
 -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인식의 문제가 양국 간 관계진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중국과 일본 간에도 센카쿠(중국명 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갈등이 가열되어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외교적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음.
 - 더욱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과 지역안보 역할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의구심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선포함에 따라, 중·일 및 한·중 간은 물론 미·중 간에도 외교적 마찰 형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집권 후 한·일,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한동안 양자 정상회의와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 그런데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현재도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2012년 말 일본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한·일, 중·일 간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2년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적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3국은 다양한 차원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내부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분간 3국 정상 간의 만남은 쉽지 않아 보임.
- 3국 간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한·중·일 FTA 협상도 공식 개시되기는 했으나, 당분간 진전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
 - 3국은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는데, 그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점임.

**현재 동북아에서처럼
상호불신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 영토분쟁은
정치,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적
체면과 국민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고 있음**

- 일본은 3국 FTA의 개방 수준을 미국이 주도하는 TPP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임.
- 향후에도 한·중·일 3국 협력을 기대하거나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ASEAN+3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

가. 영토 문제

- 한·일, 중·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가시적인 장애물은 영토 문제라 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에는 한·일 간 독도문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토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의 영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동북아에서처럼 상호불신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 영토분쟁은 정치,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적 체면과 국민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고 있음.
 - 이는 결코 정부 간 외교협상이나 국제법 적용을 통하여 명백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함. 향후 상호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외교적 타협을 시도해 나감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할 것임.

나. 역사인식의 문제

- 영토 문제와 함께 역사인식의 문제도 한·중·일 간 신뢰구축과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오래 전부터 역사논쟁이 전개되어 왔음.
 - 과거 일본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구식민사관적 논리를 전개한 바 있으며, 이는 양국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한 바 있음.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특히 최근에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유사한 역사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일차적으로 20세기 초반 군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중국대륙 침략이 일본과 한국, 중국 간 역사논쟁과 마찰의 근원을 제공했기 때문임.
 - 중·일 간에는 1930년대 일본군이 저지른 남경대학살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임.
 - 일본과 한국, 중국 간 역사인식의 핵심 문제점은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어두운 과거사를 일관되게 축소, 은폐, 부정하려는 점임.
- 한국과 중국 간에도 역사인식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도 전례 없이 치열한 역사논쟁이 전개된 바 있음.
 - 동북공정과 관련한 한·중 간 역사논쟁은 2004년 8월 양국 정부 간 외교교섭으로 일단 봉합되기는 했으나, 향후 중국의 내부적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음.
 -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은 일본의 한국 근대사 왜곡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곡의 내용과 수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변화, 즉 통일 이후 이에 따른 영토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 동북공정과 관련된 파문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지역에서 역사문제에 관한 한 이제까지 ‘한국+중국 대(對) 일본’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 향후 한·중관계가 한·일관계처럼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다. 민족주의 문제

- 한·중·일 간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이 엄청난 인화성(引火性)의 위험을 갖는 것은 3국 모두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 한국(북한), 중국(대만) 등 분단국들로 구성된 동북아 국가들은 아직도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 건설을 완결하지 못한 상태임.
 - 한·중·일 3국은 근대 초기 침략, 식민지배, 저항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주고받았음.

한·중·일 3국**민족주의의 또 다른****특징은 국가 또는****정부가 일방적으로****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시민사회의 일부 또는****민간그룹이 배타적****민족주의의 주체로****나서고 있다는 점임**

- 역설적인 것은 일본에게 침탈당했던 한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에 대해 가해자였던 일본조차도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으로서 나름대로의 심각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임.

- 최근 한·중·일 3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력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과거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는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이념적 공백을 ‘대중화주의’로 표방되고 있는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음.
 - 일본의 보수정치권도 1990년대 이후 장기간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통국가’ 또는 ‘강한 일본 건설’ 등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교묘하게 활용해 나감으로써 일본정치의 우경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지난 5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쟁취로 식민지배, 전쟁, 가난으로부터 상처받은 국민적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주변국들에 대한 반외세 정서와 자주에 대한 강조는 한국사회 내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한·중·일 3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일부 또는 민간그룹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임.
 - 동북아 국가들 간 민족주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 간 대화나 타협만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역내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임.
 -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편협하고 감성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음.

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 증대와 같은 경제적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역내 국가들에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도국의 리더십과 같은 정치적 조건들도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이러한 역내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 과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변국들과의 신뢰구축 미비 등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음.
 - 최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전통적인 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보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 더욱이 최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국 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역내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의 중심무대에 재등장한 중국과 이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안보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려는 일본 간 전략적 경쟁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 간 경쟁관계는 ASEAN+3 등 역내 협력이 진전되면서 보다 더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며, 양국은 ASEAN 등 주변 국가에 경쟁적으로 접근강화를 시도함으로써 역내협력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중·일 간 첨예한 전략적 대립구도는 향후 동북아와 동아시아 협력기반 자체를 와해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중 간 지역패권 경쟁이 한국, ASEAN 등 역내 국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중 관계는 역내 협력에 최대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단독으로 역내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유럽 통합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와 독일처럼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임.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의 중심무대에
재등장한 중국과
이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안보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려는
일본 간 전략적 경쟁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은 여하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유연한 자세와 확고한 태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몇 가지 고려사항들

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간 세력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임.
 - 동북아의 양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 일본과 군사·경제적으로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역동적 증견세력으로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중간자 또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구하고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일본과 안정된 양자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한국이 중국과 일본 간 진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경사된 외교정책을 펼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 될 것임.
 - 한국은 중국, 일본 모두와 안정되고 균형된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최근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아베 총리의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내·외 정책노선이 향후 일본과 중국, 한국관계에 많은 난관을 예상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 고이즈미 총리와는 달리 일단 주변국들과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이룩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은 여하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유연한 자세와 확고한 태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비록 역사인식의 문제나 영토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한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정상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야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일·중 관계에 대한 하나의 보장책으로서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는 필수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음. 일차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외 주요 강대세력들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원공(遠交近攻)’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 유지는 필수적임.
 - 향후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간 중재자 또는 양국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교량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인바, 이 경우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한 협상력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강대국 간 힘의 전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대규모 폭력이 수반되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향후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미국의 안정적 균형자 역할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임.
 -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다른 주요 고려할 점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미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동북아협력에 미국의 직간접적 참여는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것이기 때문임.
 -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사활적인 안보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바, 미국이 자신이 배제된 동북아 지역협력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과 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향후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미국의 안정적 균형자 역할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임

다. 한·중·일 3국 FTA 체결

-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실질적 수단은 한·중·일 3국 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일 것임. 다행인 점은 3국이 2012년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초반에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했다는 점임.
 - 향후 한·중·일 3국 FTA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핵심기제가 될 것이며, 이는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진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임.

한·중·일 3국**FTA는 성사될 경우****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임. 역사 및****영토 문제로****혼란스러운 3국간****양자 관계의 안정성****유지와 증진에 중요한****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임**

- 과거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3국 FTA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나, 중국에 대해 강한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유보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음.
 - 일본이 3국 FTA 협상을 전격 수용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임. 이는 일차적으로 기존 한·일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이미 2012년 상반기에 양자 FTA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응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음.
 - 즉 일본은 한·중 FTA에 대응하여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국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중·일 3국 FTA 또한 문제가 다대함. 무엇보다도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 및 영토 문제 때문에 과연 협상 자체가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최근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한·중·일 3국 FTA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임.
 -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에 보다 무게를 두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3국 간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최종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FTA는 성사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혼란스러운 3국 간 양자 관계의 안정성 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물론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 해서 곧바로 3국 간 양자관계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황의 악화방지 및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임.
 - 향후 TPP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 3국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또 다른 대안적 기제로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임.

라. 동북아 정상회의의 추진

- 한·중·일 3국 정상회의체제가 최근 수년간 구체화·제도화되어가고 있으나,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체제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동북아 정상회의 체제를 검토·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¹⁾
 - 향후 한·중·일 3국 정상들 간 동북아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협력과 관련한 정치, 안보, 군사, 경제, 통상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은 최고 실력자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3국 정상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동남아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존의 3국 정상회의와는 차별적인 또 다른 형태의 정상회의체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이 먼저 제1차 동북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되, 일본 총리와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후 중국 또는 일본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회의의 의제는 한·중·일 3국 간 정치적 신뢰구축, 역내 주요 안보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대화, 3국 경제통합, 기타 3국 간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심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ASEAN+3)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존의 3국 정상회의와 차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ASEAN+3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동북아 정상회의도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 한국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독도 등 주변국들과의 영토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출범한 바 있음. 그러나 한·중·일 3국 간 역사논쟁과 관련하여 동북아 역사재단 설치와 같이 정부주도의 이니셔티브만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중재자가 되려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21세기 동북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동북아 국가들 간 역사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기존의 한·일 간 또는 한·중 간 역사공동위원회 수준을 넘어서는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역사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자국 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중재자가
되려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21세기
동북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상호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역사인식의
공유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북아 3국 중
한국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임**

사관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를 공동의 역사인식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기술을 통하여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편견 없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또한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는 역사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3국의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Track II)에서 발의·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후원·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와 같은 비정부 차원의 민간 역사공동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음.

-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 번도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패권을 추구한바 없기 때문임. 또한 상호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역사인식의 공유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북아 3국 중 한국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임.

- 동북아 국가들 중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진 한국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 일본의 시민사회나 아직도 맹아단계에 있는 중국의 시민사회보다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임.

○ 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 시점에서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북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국가들도 개방과 지역협력이라는 세계사적 큰 흐름을 언젠가 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주도의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구상이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해도, 결국 언젠가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선도국이 갖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할 것임.

주석

- 1) 기존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데,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회의에 중국은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 저자 약력

■ 배금찬

現 국립외교원 교수.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미국 Claremont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서 아태연구부장과 연구실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 국제관계, 동남아 지역연구 등이며, 최근 연구로 “미중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2013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등이 있음.

목 차

1. 서론
2.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
 - 가.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 '에너지 기본계획'
 - 나.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 다.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 탈원전
3.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 가.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
 - 나. 3·11 대지진의 피해 인식과 일본인의 정치의식
 - 다. 3·11 대지진의 피해 인식과 일본인의 투표행태
 - 라. 3·11 대지진의 행정적 피해 사례: 동북지방의 선거 운영 피해
4. 나아가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 서론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의 대지진 발생 이후 약 3년 정도가 지났으나 피해 지역의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약 29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난민들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일본인들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 마지막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함.

2.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

가.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 '에너지기본계획'

-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기본법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음. 에너지정책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안정공급확보(Energy security), 환경에의 적합성(Environment), 시장원리를 활용한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의미하는 3E의 실현임. 일본의 원자력 정책도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해짐. 에너지기본계획은 3년에 한 번씩 법적 재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음.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0년 6월에 제2차 개정이 실시되었음.
- 제2차 개정 시에도 ① 에너지안전보장확보, ② 지구온난화 대책, ③ 에

너지를 기축으로 한 경제성장 실현이 중시됨. 세계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및 중동의 리스크 증가로 원유가격 상승이 예상되었고, 교토의정서 등에서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한 상태였으며,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대불황을 겪으면서 각국의 산업 구조 및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고용 창출을 모색함. 일본은 제2차 개정에서 3E실현과 함께 에너지를 기축으로 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산업구조 개혁의 목표를 제시함.

- 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로 ① 에너지 자급률 및 화석 연료의 자주 개발 비율 증대(38% → 약 70%), ②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전원 비율 증대(34% → 약 70%), ③ 가정 내 발생 이산화탄소 50% 감소, ④ 산업부문의 세계 최고 에너지 이용 효율 유지 및 강화, ⑤ 국내 기업군 에너지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톱 셰어(top share) 획득을 제시함.
- 위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강조된 방안이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이었음. 당시 민주당 정권은 2020년까지 9개의 원자력 발전소 신설 및 2030년까지 최소한 14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 2007년 현재 26%인 국내 총 발전량 대비 원전 비율을 53%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이 외에 민주당 정권이 강조한 내용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도입 확대가 있음. 이에 관련된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각회의 결정이 2011년 3월 11일에 이루어짐.

나.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각의 결정이 진행된 날(3월 11일)에 3·11 대지진이 발생함. 일본 국내 관측 최대 규모에 쓰나미가 동반된 최악의 재해임. 2013년 8월 시점에서 조사된 3·11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약 19,000명, 피난인 수가 약 29만 명에 이룸.
- 3·11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발전소의 설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방사선이 누출되는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함.

다.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 탈원전

-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후, 일본 내에서 탈원전론이 확대됨. 2011년 5월 간 총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의 각의 결정이 진행된 날(3월 11일)에 3·11 대지진이 발생함. 일본 국내 관측 최대 규모에 쓰나미가 동반된 최악의 재해임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선거 대비
메니페스토에
탈원전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의
원전재가동에서
원전제로로 방향을
바꿈**

발표함. 이는 원전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됨. 간 내각은 2011년 6월 국가전략실 내에 ‘에너지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전략담당대신(장관)이 의장을, 경제산업대신과 환경대신이 부의장을 맡아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간 총리의 조기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1년 8월 간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고 이후 노다 총리가 뒤를 이음(2011년 9월 취임). 노다 총리는 원전재가동론자였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2012년 5월 홋카이도의 도마리(泊)원전 3호기의 정기 점검 시작 이후 일본 내 원전이 42년 만에 모두 정지됨. 이후 여름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를 새로운 안전 감시 체제 하에서 재가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노다 총리가 이를 허용하여 2012년 7월에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가 재가동됨(2013년 9월까지 운행).
- 2012년 6월에 열린 에너지환경회의에서 노다 정권은 2030년 시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2010년 현재 원자력, 재생가능, 화력의 비율이 26%, 10%, 64%인데 이에 대해 2030년까지 시나리오 1은 원자력 0%, 재생가능 35%, 화력 65%, 시나리오 2는 각각 15%, 30%, 55%, 시나리오 3은 각각 20~25%, 25~30%, 50%로 제시함.
- 노다 정권은 세 시나리오 가운데 국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에 포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는 노다 정권이 시나리오 2를 채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음. 하지만 중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의 움직임이 의식한 민주당 내에서 점차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또한 8월 조사된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초창기 50%대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원전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 민주당의 위기감이 높아짐.
-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선거 대비 메니페스토에 탈원전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의 원전재가동에서 원전제로로 방침을 바꿈.
- 2012년 9월에 에너지환경회의에서 공표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2030년대 원전가동제도가 가능해지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고 사

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사업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이러한 모순된 계획은 시민단체 등의 원전반대파와 경제계 및 관련 지자체 등의 원전 추진파를 동시에 포섭하기 위한 제안으로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에너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는 요구도 발생함.

- 민주당은 의원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에너지 전략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에너지정책에 관한 당내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함. 노다 정권은 2012년 9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예정되었던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결정을 미루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함. 이러한 원인에는 원전정책과 관계된 타국과의 관계도 있었음. 미국의 경우, 자국 내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고 동맹국이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제로를 추구할 경우 핵관련 기술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함. 또한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은 프랑스의 원전건설회사 아레바(AREVA)사와 원전 부문 제휴를 맺고 있어 일본이 원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큰 수입원이 상실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일본의 전력회사로부터 10톤의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있고 MOX 연료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탈원전을 지향할 경우, 수입문제와 함께 방사선 폐기물의 귀속문제가 걸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2012년 12월에 진행된 중의원선거에서 원전정책도 주요 이슈였지만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3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하지만 자민당의 승리를 통해 유권자들이 탈원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본인의 의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2012년 12월에
진행된 중의원선거에서
원전정책도 주요
이슈였지만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3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3.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

가.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

- 사용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부터 매월 3,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로 3,000명 가운데 약 1,000명은 매월 추적조사로 진행됨. 본 절의 내용은 해당 조사 가운데 3·11 대지진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2012년 3월과 2013년 1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 일본 전체가 입은 피해를 ‘사회적 피해’로, 유

지진 발생지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대지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지진 발생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지진으로 인한 사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권자 개개인이 입은 피해를 ‘개인적 피해’로 구분함.

- 사회적 피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함. 2012년 결과에는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의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개인적 피해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남. 2012년에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별개로 구분했던 반면에 2013년에는 연관 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다시 말해, 개인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직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일본 전체, 즉 사회적 피해도 크게(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됨. 바꾸어 말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진 발생지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대지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지진 발생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지진으로 인한 사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표 1>).

〈표 1〉 사회적 피해 인식 정도의 규정 요인
(Ordered Logit Model)

	2012년 조사	2013년 조사
개인적 피해	0.027	0.078*
성별	-0.349***	-0.169*
연령	0.003	0.006
학력	-0.149**	-0.127**
소득	-0.052*	-0.021
기혼여부	0.108	0.034
TV이용정도	0.067	0.034
신문이용정도	0.014	0.026
인터넷이용정도	0.068**	0.017
_cut1	-4.118	-3.525
_cut2	-2.183	-1.576
_cut3	1.027	1.503
N	2,948	2,725

*** p<0.001, ** p<0.01, * p<0.05

출처: 境家 2013, 59 <표 1>

- 2012년과 2013년 모두에서 여성의 피해인식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조사되었고 저학력 유권자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을 보임. 2012년 결과에서는 저소득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유의하지 않음.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권자가 지진과 상관없이 일본의 경제상황을 보다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이 외에 TV 이용 정도, 신문 이용 정도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2년 결과에서 인터넷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보임. 즉,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피해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남(<표 1>).

나.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과 일본인의 정치의식

- <표 1>의 조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분석 결과에서 개인적 피해인식에 따른 정치관심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보다 사회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본 설문조사 외에 NHK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일본인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됨.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각 정책쟁점에 대한 지진 전후의 태도 변화



출처: 境家 2013, 62 <그림 5>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에 관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의 국제 공약을 중시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보다 이산화탄소 공약을 단념하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음

- 2012년 3월 설문조사에서 1년 전(대지진 발생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무역자유화’, ‘미국과의 관계 강화’,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 ‘ODA 등의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물음. 일본의 무역자유화 추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물은 질문에 현재와 대지진 발생 전의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남.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관해서는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대지진 발생 전과 비교하여 현재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아졌음.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전력에 관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의 국제 공약을 중

2012년**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 압승을****거두었고****일본유신회의 의적이****증가하였지만,****이에 대한 원인이****3·11 대지진으로 인한****영향으로 볼 수 없음**

시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보다 이산화탄소 공약을 단념하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음.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대지진 발생 전보다 원조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아졌음. 대지진 후 일본인의 의식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국제적 관계보다 자국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일본인의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는 하나의 단면으로 보임(<그림 1>).

- 2013년 1월 조사에서 각종 복구 대책에 대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함. ‘부흥재원을 위한 증세’, ‘부흥재원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 ‘방재 관련 공공사업 확대’, ‘거주 지역 근처로 지진 파편 도입 및 처리’ 등에 대한 인식을 ‘절대 실시해서는 안된다(1)’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5)’까지 5척도로 질문함.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부흥 대책은 공공사업 확대이고 그 뒤를 공무원 인건비 삭감, 지진 파편의 도입 및 처리, 부흥 증세, 원전 재가동 순으로 나타남.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대지진 발생지 근처에서 강하게 나타남.
-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인의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2012년 9월 조사에서 ‘너무 강한 대응이었다(1)’부터 ‘너무 약한 대응이었다(5)’까지 5척도로 질문한 결과와 독도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국에 양보해야 한다(1)’부터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5)’까지 역시 5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결과적으로 사회적 피해 인식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지난 대응에 대해 약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영토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나타남. 즉, 사회적 피해 인식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강한 내셔널리즘의 경향을 보임.

다. 3·11 대지진의 피해인식과 일본인의 투표행태

- 2012년 12월 조사와 2013년 1월 조사 대상(패널데이터)의 결과에서 대지진 후 정치관심이 증가된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치 참여, 즉 2012년 중의원선거의 투표 참여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투표 참여가 낮았음(실제 투표율도 낮았음). 3·11 대지진 이후 정치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관심이 정치 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대지진에 대한 피해인식과 투표향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지진의

피해인식에 따라 민주당보다 자민당 또는 일본유신회를 선택한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즉,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3·11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없음(<표 2>).¹⁾

- 민주당 정권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에는 사회적 피해인식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사회적 피해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당 정권과 국회(민주당 외의 정당 포함)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조사됨. 다시 말해 사회적 피해인식이 심할수록 3·11 대지진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등, 정치 전반에 관한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2> 중의원선거 비례대표구 투표 향방의 규정 요인
(Multinomial Probit Model)

	자민당	일본유신회
사회적 피해 인식	-0.165	-0.108
개인적 피해 인식	-0.133	-0.128
성별	0.397*	0.329
연령	-0.031***	-0.019*
학력	-0.292*	-0.32**
소득	-0.023	-0.061
기혼여부	0.165	0.085
정치관심	0.060	0.039
정수	3.199***	2.706***
N	679	

*** p<0.001, ** p<0.01, * p<0.05

출처: 境家 2013, 68 <표 7>

라. 3·11 대지진의 행정적 피해 사례: 동북지방의 선거 운영 피해

-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4월의 지방선거가 2011년 9월과 11월로 미뤄진 지역이 다수 발생함. 2012년 중의원선거에도 대지진 피해가 다소 선거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 대지진 피해로 인한 선거 운영에의 피해는 유권자 확정(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투표 등록 등), 선거운동 관리(입후보 접수, 정보 제공 등), 투표 및 개표(기일 전 투표 사무, 당일 투표 및 개표 사무) 등에서 나타남.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선거 지연 등 행정적인 피해를 초래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침.

2012년 중의원선거에도 대지진 피해가 다소 선거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 대지진 피해로 인한 선거 운영에의 피해는 유권자 확정,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등에서 나타남. 원전의 의존도를 높이려던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은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탈원전으로 돌아섬. 자민당의 승리는 원전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대지진의 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일본이 국면한 심각한 경제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나아가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 원전의 의존도를 높이려던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은 3·1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인해 탈원전으로 돌아섬. 이후 탈원전에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선거와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유권자 의식 역시 원전 재가동을 희망한다고는 볼 수 없음. 자민당의 승리는 원전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 대지진 발생 후 한국은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함. 약 520억이라는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모아 전달했으나 이후 얼마되지 않아 일본이 예정하고 있던 교과서 발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됨. 이는 매뉴얼 사회라는 일본 사회의 한계로 지적됨.
- 2012년 중의원 선거와 2013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강해짐. 대지진의 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일본이 당면한 심각한 경제문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경제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내외적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일본 정부와 국민 입장 모두에서 보수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보수화 경향이 당분간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에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여유 있는 자세로 온건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 상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임.

주석

- 1) 민주당을 기준으로 한 자민당 투표, 일본유신회 투표 결과.

참고문헌 및 자료

- 이현웅. 2013. “일본의 원자력저어책—민주당정권과 자민당정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현출. 2013.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국회입법조사처보』 18, 64-69.
- 전진호. 2011.4.26. “3.11 대재난 이후의 일본과 한일관계.” 『kifs 이슈와 대안』 1-3.
- 河村和徳. 2013. “東日本大震災被害地の選挙管理におけるマンパワー不足.” 『選挙研究』 29(1), 43-56.
- 河村和徳 外. 2013. 『被災地から考える日本の選挙—情報技術活用の可能性を中止に』 東北大学出版会.
- 経済産業省. 2009. “新成長戦略(基本方針)について.”
- _____. 2010. “エネルギー基本政策.”
- 国家戦略室. 2012a. “エネルギー環境に関する選択肢.”
- _____. 2012b.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
- 境家史郎. 2013. “東日本大震災は日本人の政治意識・行動をどう変えたか.” 『選挙研究』 29(1), 57-72.
- 資源エネルギー庁. 2010. “日本のエネルギー2010.”
- _____. 2011a.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価格買取制度について.”
- _____. 2011b. “わかる新エネ.”
- 善教将大. 2013. “福島第一原発事故後の原子力世論—その規定要因の実証分析.” 『選挙研究』 29(1), 73-86.
- 復興庁. 2013.8.22. “全国の避難者等の数.”
- 자민당 홈페이지(<https://www.jimin.jp/eco/condition>).
- 『朝日新聞』.
- 『毎日新聞』.
- 『読売新聞』.

❖ 저자 약력

■ 경제희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함. 주요 업적으로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및 집권 과정과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현대정치연구』 6(2), 2013),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한국과 국제정치』 28(2), 2012) 등이 있음.

목 차

1. 서론
2. 북한의 국력
3. 북한 군사력의 평가
 - 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
 - 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 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
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가. 동북아 안보환경
 -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
5. 결론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원인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는 연구대상임.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화와 변동이 전쟁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어난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따라서 변화와 변동 이후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세력과 기존의 상황 속에서 유리한 국면을 지키려는 세력의 복합적 관계를 속에서 전쟁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현실인식의 창(窓)이 됨.
- 주로 현실주의적 전통에 따르는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전쟁을 야기하는 주요한 변수는 각국의 힘, 즉 국력(national power)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가 공감.
 - 물론 힘 이외에도 현상(status quo)에 대한 만족도 및 전쟁에서 입을 피해와 이익에 대한 타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쟁이 발생하게 됨.
-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차원보다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통해 북한의 공격력과 공격성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무기 효능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과연 북한의 군사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국력은 전쟁을 일으킬 수준에 있는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
- 국가차원 또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 한국은 상시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
 -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후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들이 존재함.

- 북한 역시 이른바 ‘피포위(under siege)’ 의식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해 상시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 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의 한 대안으로서 전 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재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전작권의 연기가 안보 확실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전작권 재연기가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MD체제 구축과 외교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2. 북한의 국력

- <표 1>에서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함.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저하와 마찬가지로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

〈표 1〉 냉전시기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1957~ 1961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성장률(%)	20.9	9.8	5.5	10.4	4.1	3.7	1.4

자료: 1985년까지는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PO, 1988); 1986~1990년은 『남북한경제지표』(통일원, 1993)

- 한국의 경제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1989년부터 남북한의 경제력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됨.
- 이로써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우세를 보여 온 북한의 대남 경제발전의 동력은 사라지고 이후 남한과의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표 2〉 탈냉전시기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성장률(%)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률(%)	1.2	1.8	2.2	3.8	-1.1	-2.3	3.7	-0.9	-0.5	0.8	1.3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 년도 참조

**한국의 경제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1989년부터
남북한의 경제력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됨**

북한의 국력은

1980년대 이후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게 존재

- 탈냉전 시기에 들어 북한의 경제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는 등 파국의 양상을 보임.
- 국제사회주의의 붕괴는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가중시킴으로써 내적 모순과 함께 위기의 국면으로 나타났다.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다소 경제발전의 기초를 보이는 듯도 하지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남한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력은 1948년 북한 정권의 출범 이후 대남 경쟁력을 상당 기간 확보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여 탈냉전 시기 들어 비교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절대적인 측면 모두에서 고착화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 외에 상대적으로 체제장악력 및 정치외교력과 같은 부문의 '견고함'을 인정하더라도, 미국 CIA의 국력지수 평가(2006)를 보면 2020년에 이르러 북한의 국력(지수)은 한국의 5%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임. 이러한 평가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반복됨.
- 이상에서와 같이 결국 국내외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도 북한의 국력은 1980년대 이후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게 존재함.
 - 즉 1970년대 중·후반까지 (1인당 GNP의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고 또한 군사비 지출이 우월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남한에게 안보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었음.
 - 잠재적인 군사력 및 전쟁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약 40배가 벌어진 현재에 있어서 과거의 불안함을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음.
 - 이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보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위협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함.

3. 북한 군사력의 평가

- 현재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음. 하나는 남북한 간 경제력에서 약 40배(2012년 현재)의 격차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 열세라는 입장임.
 - 전자의 경우 북한의 군사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후자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음.
-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한 간에 비대칭 전력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단,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사고하는 것은 당연한 인식임.
- ※ 최신 군사력 비교 방법으로 워 게임(war game)과 같은 동태적 방법이 존재하는데, 대입 변수의 복잡함과 명쾌한 검증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

-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은 남북한의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를 이른바 ‘날알 세기(bean counting)’ 하는 ‘단순 개수 비교’ 방식임.
 - 이 방법은 수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인 차이가 곧 군사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볼 때 병력과 장비의 양적 비교가 현대의 첨단전쟁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순 개수 비교는 군사력에 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주요 이유로는,
 - 첫째, 병력과 무기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 둘째, 모든 양적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 셋째, 매우 중요한 조직적 역량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를 이른바
‘날알 세기(bean
counting)’ 하는
‘단순 개수 비교’ 방식은
수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인
차이가 곧 군사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

한국의 해군 전력**북한의 90%라는****한국국방연구원의****2004년 평가는****1994년을 기준으로 한****과거 평가 91%보다도****후퇴한 수치.**

이는

한국형구축함건조사업**(KDX)을 통해****10년간 막대한 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 해군****전력은 오히려****후퇴한 것으로 평가**

- 넷째, 다양한 범주의 단위 부대와 무기체제가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 특히 북한의 병력 수 측정에서 과장되는 측면이 존재함.

- 사회주의 특유의 ‘인민전쟁론’의 전쟁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우, 민군 총원은 남한과 같은 정규 군인과 다른 의미를 가짐.
- 상당수 인민군은 평시에 도로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나 농사일 등에 동원되는 ‘반군반민(半軍半民)’의 성격을 지님. 또한 대부분의 인민군 부대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거나 부대 경비를 자체 조달함.
- 사단 병력의 남북한 구성 규모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계산하는 경향이 있음.

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 ‘전력지수’를 사용해 군사력을 비교하는 방법임. 이는 기준지수를 정하여 각 무기의 상대적인 전력을 평가하는 방식임.

- 이 방법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에 비해 수상전력 및 전투기전력에서만 북한을 근소하게 앞설 뿐, 전차전력·포병전력·장갑차전력·수중전력 등에서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국방부, 미 랜드연구소).

○ 한국국방연구원의 ‘무기효과지수/무기의 부대가중치(WEI/WUV-III)’를 이용한 기존 전력 평가에는 전력지수의 평가 및 적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 첫째, 단순 개수 비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단순 화력(sheer firepower)’에 대한 평가에 머물고 있음. 즉, 노후되어 실제로 전투력이 거의 없는 무기라도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결과적으로 높은 전력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 둘째, 이 방법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수치를 과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과거 미 국방부는 WEI/WUV-III 방식을 통해 소련제 무기들을 다소 과대평가한 경험이 있음(예: K-1전차의 1.31, T-34에 0.97 부여).
- 셋째, 전력지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WEI/WUV-III가 1979년에 유럽지역 무기들의 지수를 원용하여 추산한 결과의 지수라는 점. 1979년에 만들어진 무기효과 지수를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적실성에서 한계가 있음.

○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상관성에서도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한국의 해군 전력이 북한의 90%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의 2004년

- 평가는 1994년을 기준으로 한 과거 평가 91%보다도 후퇴한 수치임.
- 이는 한국형구축함건조사업(KDX)을 통해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군 전력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 것임.
- 과거 연구평가 시점 이후 KDX-I과 KDX-II 사업에 따라 도입한 신형 구축함과 누락되었던 장보고급 잠수함 4척에 대한 함정 지수만 포함하더라도 한국 해군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훨씬 능가하게 됨.

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

- 각국 군사능력의 측정에 있어 군사비투자 누계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평가됨.
 - 국방비는 요소 비용의 측면에서 인적·물적·조직적 구성요소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
 - 현재 한국의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많지만 북한이 군비 증강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군사비투자 누계액에서 남한보다 앞선다는 주장이 존재함.
 -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예산 편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국방부는 “1996년 현재 북한의 누계액은 618.1억 달러인데 비해서, 한국의 누계액은 567.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누계 산정의 공정성을 차치하고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이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 현재 군사비 투자 누계액에서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론
 - 2008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이 약 67억 달러, 남한이 238억 달러로 한 해만 비교해도 170억 달러 이상이 차이가 남.
 - 한국전쟁 이후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일일이 계산한 결과 2008년까지의 남한 군사비 누계액은 3,692.8억 달러이며, 북한은 1,638.07억 달러 정도
 - 이미 5년 전에 누계 상 2,000억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후 해마다 170~180억 달러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2013년 현재 추정치: 북한이 약 2천억 달러이고 남한이 5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 또한 한국의 경우 투자비 누계 계산에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도 계상하지 않았음. 미국의 군사원조와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따르면, 군사비투자 누계에서도 1977~1981년부터 남한이 이미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존재함.

누계 산정의 공정성을 차치하고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이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08년 현재 군사비 투자 누계액에서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론

2012년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리더십이 전면 교체되었고,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 시위는 2013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 매우 위협스럽게 진행

-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군사비는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 말 이래 남북한의 군사비 격차는 이미 9배에 달하고 있음(1998년 기준: 북한 13억 4,300만 달러, 남한 123억 9,800만 달러).
- 군사비 지출이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해 온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무기의 획득과 같은 전력 증강이 한계에 달해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
 - 실제로 북한은 단지 장사정포(다연장 로켓포)를 늘여 대남 억지력 및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려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을 뿐, 전반적으로 전력 증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저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군수산업 가격우위론에 입각해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함.

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 동북아 안보환경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역동적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양상은 진행형임.
 - 2012년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리더십이 전면 교체되었고,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 시위는 2013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 매우 위협스럽게 진행됨.
 -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던 시점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서 국면전환이 연출되는 듯했으나, 북한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통보로 다시금 냉각 상태에 들어섬.
- 북한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발언과 행태를 감안하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 가능한 변화의 가능성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긍정적 전망으로는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부정적 전망으로 북한이 또다시 핵·미사일을 통한 고강도 도발을 전개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안보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작권 재연기 등의 이슈와 맞물려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이후 'G2'로 표현되는 미·중 간 전략적 관계 현실화
 -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균형, 또는 이미 일부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중국에 역전 허용(최근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 미국의 Pivot to Asia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불가피론 부각됨.
-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 → 동아태전략 → 한반도전략'의 위계와 순서에 입각해 수립됨.
 -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인 바, 현재 한·미 간 유기적 대북공조 하에 진행 중임.
 - 대북정책 원칙은 "비핵화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 수행전략은 2009년 취임 초기 '대화 중시 전략'에서 2차 핵실험 이후 '온화한 무시 전략(benign neglect)'으로 선회,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및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 외교수단은 한미동맹 하에서 국제협력 및 제도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선 외교·경제적 수단 활용, 후 군사적 압박 비(非)배제'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

-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힘.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정부가 2020년 이전에 도입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발사 전 대응을 위한 것임.
 - 한국형 미사일방어망(MD)인 KA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발사 후 조치를 위한 것임.
 - ※ 이런 전략에 따라 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위협 단계를 1단계 위협, 2단계 사용 징후, 3단계 사용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
- 순수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적의 군사위협에 대해 가용한 모든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 전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고 있음.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함*

**한국의 안보 확실성
추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대응하여 서로
자극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비하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비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대비책인데,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먼저 킬 체인은 대북 선제공격(또는 예방전쟁)의 수단인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킬체인의 사슬을 끊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 비용은 우리의 그것보다 매우 낮을 것임.
 - KAMD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theater)에서 현재의 낮은 요격률을 향상할 가능성이 낮음. 결국 두 안보대응책 모두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보다 ‘손쉽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임.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재정악화를 불러오고 또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될 공산이 큼.
- 즉 남북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균열이 서로가 군사적 우위에 서려는 노력 속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전환되면서 서로에 대한 살상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와 함께 현재 전작권 재연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이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이 불박이 미군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안보 확실성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
 - 주한미군의 ‘희생(전작권 전환 연기)’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비대칭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MD체제 동참, 한국군 해외파견, 최첨단 미국 무기의 수입증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등과 같은 이슈에서 불리한 입장에 빠짐.
- 결국 한국의 안보 확실성 추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대응하여 서로 자극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 현 단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관계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는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었음.
 - 남북한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음.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해야 함.
- 이미 국제문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해야 할 것임.

5. 결론

- 북한의 군사위협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남한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임.
 - 남북한의 국력 차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보다 위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압도함.
 - 군비증강을 합리화시키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북한군사력 우위론이 한국사회 내에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려 있는 것이 현실.
-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현존군사력에 있어서 북한 우위론의 근거 논리로 제시되어 온 것들은 병력과 무기의 수에 대한 단순 개수 비교를 통한 북한 우위론이나 군사비 투자액의 누계액에서 북한이 앞선다는 주장, 또는 무기의 실질구 매력에서 북한이 우세하다는 주장 등 어느 것도 큰 설득력이 없음.
- 북한의 절대적 군사 우위라는 피해의식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적합한 군사대비와 외교적인 노력이 효율적으로 병합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우위론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을 과장하고 확대재생산하는 흐름은 반복됨.
- 탈냉전 이후에도 북한이 국민총생산의 30%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도발의지를 우려하는 측면이 큼.
 - 군사비 지출의 절대액에 있어 가파른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절대적 군사
우위라는 피해의식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적합한 군사대비와
외교적인 노력이
효율적으로
병합될 수 있음**

**전작권 재연기는
한시적으로 한국의
안보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사·외교적
부담과 국가방위의
자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할
선택임**

-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북한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는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확장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님.
 -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함.
- 전작권 재연기는 한시적으로 한국의 안보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군사·외교적 부담과 국가방위의 자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할 선택임.
 - 삼국시대의 나당연합군, 임진왜란 때의 조·명연합군의 사례에서 우리의 영웅 김유신과 이순신, 권율 등은 온전한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동맹(?)’의 허락을 받은 후 제한적인 권한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21세기에서 또다시 재현할 필요 없음.
 - 지난 60년의 성과와 함께 한미동맹 미래 60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애원하며 매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국력과 입장에 맞는 군사적 이익을 공유하고,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신념이 우선임.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 국방부, 『IMF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서울: 국방부, 1998).
-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이론과 실상, 그리고 우리의 선택』(서울: 법문사, 2008).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셸리그 해리슨, 이홍동 역, 『코리안 엔드게임』(서울: 삼인, 2003).
- 오관치, 『북한의 군사위협정도』(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4).
-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 Arbetman, Marina and Jacek Kugler, *Political Capacity and Economic Behavior* (Boulder: Westview Press, 1997).
- Bermudez, Jr., Joseph S. *North Korean Special Forces*, 2nd Ed.(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8).
- Dupuy, T. N., *Numbers, Predictions and War: Using History to Evaluate Combat Factors and Predict the Outcome of Battles* (Fairfax, Va.: Hero Books, 1985).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Plano, J. C. and R. Olton, *International Relations Dictionary* (California: Abc-Clio, 1982).
- Rosen, Steven J. and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77).

<논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년 국민 안보의식조사,” 『연합뉴스』, 2010년 2월 10일.
- 이영호, “북한 군사력의 해부: 위협의 정도와 수준: 남북 군사력 균형 평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IV권 제3호(1977).
- 이운식, “2014년 한미관계 전망,” 2013년 한국평화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3년 11월 29일.
-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율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5년 개원 기념 학술회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2005년 4월 7일.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Beldecos, Nick and Eric Heginbotham,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Korea,” *Breakthrough* (Spring 1995).

Mearscheimer, John, “Assessing the Conventional Balance: The 3:1 Rule and Its Cr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13, No.4(Spring 1989).

O’Hanlon, Micheal,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22, No.4(Spring 1998).

Posen, Barry R., “Mea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al Bala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3(1984/85).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09,” in *SIPRI Fact Sheet* (March 2010).

❖ 저자 약력

■ 이정우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 동맹의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월간 『통일한국』 편집장, 남북한 최초 공동출판사업 『조선향토대백과』(전 20권) 편찬팀장 등을 역임. 최근 저·역서로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공저), 『북조선탄생』(공역)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한미동맹의 방위공약 이행확실성 현황과 제고방안”,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 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통일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와 ‘남북공조’간 협상공간 평가” 등이 있음.

JPI정책포럼 현황

- 신각수 · 김성한 · 서창록 · 조정현 · 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 2013-13/14/15)
- 조양현 · 신정화 · 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 (No. 2013-9/16)
- 주철기 · 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 · 이성우 · 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 · 한인택 · 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No. 2013-04)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3-03)
- 서승원 『일본의 대외전략을 다시 묻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한중일 트라이앵글 속의
한국』 (No. 2013-02)
- 이성우 『사회과학 관련 싱크탱크의 역할: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하는가?』 (No. 2013-01)
- 이승주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No. 2012-18)
- 박종철 『귀국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No. 2012-17)
- 이규창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No. 2012-16)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No. 2012-15)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No. 2012-14)
- 장노순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No. 2012-13)
-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 연계』 (No. 2012-12)
- 윤태영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No. 2012-11)
-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No. 2012-10)
- 김장현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No. 2012-09)
- 홍승묵 『UN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안 12개조』 (No. 2012-08)
- 김진호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No. 2012-07)
-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2-06)
- 유호근 『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No. 2012-05)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No. 2012-04)
- 진행남·오병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방안』 (No. 2012-03)
-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No. 2012-02)
- 장준영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No. 201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